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허한결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배선혜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개선방안 연구	염철호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	성은영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김성준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상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근린상권 실태 분석	임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이혜원

수시과제

①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건축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건축·도시공간 정보는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이다. 현재 건축행정정보는 「건축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산화되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245개 자치단체에서 분산 운영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2019~2022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통합 재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전산자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료의 제공 절차 및 자료 보안과 자료의 민감도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 매뉴얼인 국토교통부 공고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매뉴얼'은 2013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 공고 이후 미개정된 상태이다. 즉, 전국 단위 건축행정 전산자료 목록과 사용자 입장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하며,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따르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료제공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행 체계가 지속된다면 향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단위 자료제공에 따른 민감정보 유출 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준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할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디지털 트윈 대응을 위한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민감

정보 등 데이터 공개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허한결

②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 방안 연구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의 증가, 기후 위기,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 증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돔 텐트, 모듈러 주거 및 교실 등과 같은 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2012년 농림식품부의 농막 규제사항 완화 이후 가설건축물 허가 및 축조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건수는 2017년에 비하여 약 1.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존재하여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설치 가능한 구조인지 등에 대하여 단순한 질의 성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기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하거나 안전사고의 증가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제도 현황과 조성 현황, 사회적 논의 분석,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문제점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건축물 판단기준의 재정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가설건축물 수요에 대응하고, 가설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배선헌

③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개선방안 연구

과거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공급이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 확대와 2012년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설치에 이어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 등을 계기로 사회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배경은 공공부분 주도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는 재정적 부담과 다양한 수요대응 등에 한계가 있고, 수익 확보에 치중하는 기존 민간주택 공급주체를 대신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주체가 새로운 주택공급 주체로서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주택은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사회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 275건, 4,453세대가 공급되었거나 공급 중이다.

그간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시장 정책으로 양분되어 왔으며, 주거공간과 거주자의 질적 제고를 모색하는 주거문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거정책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문화, 민간 건설업체 주도의 주택 상품화, 소유가치 중심의 주택 자산화로 비판받는 주택시장에서 거주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고, 공동체, 지역사회, 공유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주가치 증진에 보다 주거정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택에서 다양한 거주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다양하면서 개별적인 요구를 도출하고 기획, 설계, 운영 단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수익에 치중하는 민간 건설사나 표준화와 공평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주체에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사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주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방식은 공급 및 운영방식의 획일성과 경직성, 민간의 높은 사업비 부담, 운영보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 등의 한계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넘어서는 다양한 거주가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사회주택이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사회주택의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주택의 공급 효과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철호

4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

1990년대 전체 주택 중 22.7%에 불과하던 아파트는 30년이 지난 2020년 전체 주택 중 62.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택 유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효율이 높은 아파트 공급에 주력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아파트 독점경향과 그로 인한 높은 환금성으로 아파트는 독점적 지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위기, 감염병 등 신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언택트 수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달로 인한 여건 변화는 삶의 공간으로서 '집'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거주 여건의 변화는 주택유형과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를 더욱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소득증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주거의 디자인, 규모 등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거주 여건 변화와 다각화된 수요는 공산품과 유사한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점차 '집'은 각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인 '문

화'로서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자산 가치로만 판단하는 인식은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한 거주 불안정이 심화되어가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역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대량 공급에 치중하여 파편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거주 여건 형성을 위해서는 '집'을 부동산 가치에서 '삶터'로서의 가치로 여기는 주거문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거주가치 중심의 주거문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은영

5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최근 관광 트렌드는 개인 성향에 따른 개별관광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대부분은 개별관광객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관광콘텐츠가 확충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인 중심의 관광환경 변화 속에서 관광안내소는 현장에서 개별 도보 관광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을 주거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시설이자 랜드마크로써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 502개의 관광안내소는 부적절한 입지, 과대 또는 과소 규모, 낮은 품질의 디자인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관광안내소가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 사업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안내소 관련 지침들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배포된 '2015 관광안내소 운영지침', '관광안내소 매뉴얼'이 관광안내소의 입지, 공간, 규모,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국내 관광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연구는 관광안내소 지침 내 입지 및 공간, 디자인 관련 기준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관광안내소 현황, 문제점 및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각 항목별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각 기준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향후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지침 등이 개선되면 관광객별로 기존 또는 신규 관광안내소가 도보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적정 위치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더불어 관광안내소가 단순히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편안한 휴식공간을 갖춘 스마트한 복합공간이자 개성있는 디자인의 지역 아이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준

6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2002년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및 건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국내 현충시설은 2,259개소(2021년 기준, 해외현충시설 1,386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시설과 국가수호 관련시설로 구분되며, 특히 시설유형은 비석·탑·조형물·상징물·장소·기념관·사당·생가·부속건물 및 관련시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현충시설은 국가의 주요한 상징정책인 보훈정책을 실현하는 매개체이며 국가

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형성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보훈선양이라는 현충시설의 기본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문화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현충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현충시설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이 가지는 가치와 기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로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기본전제가 되며, 현충시설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이들을 기념 또는 추모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훈을 널리 알려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선양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서 국가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서 현충시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현충시설을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관점을 현충시설의 지정·관리·건립 방향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민

7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근린상권 실태 분석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 선정 개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전국 534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구분되며, 2019년도에는 기존 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 유형 중에서도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으

로 대표되는 근린재생형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되어있는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추진되며, 근린상권 활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 새로운 문화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사업지 근린상권에서 휴업 및 폐업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권의 유동인구, 점포 매출액이 도시재생사업 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9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근린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린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역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지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근린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근린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개별 점포의 생존율로 보고, 점포 생존율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대 근린상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점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공간특성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의 근린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보영

8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2019년 12월 19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질의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2021년 기준, 자문에 대한 응답 건수 중 5.4% 차지) 또한, 기존 건축·도시 관련 위원회와 달리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은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 만큼 기관별 사업추진 절차, 사업 특성 등에 따라 구성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8항에 따라 법령을 통해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내용분석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역할 등에 대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공정성, 전문성,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에서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혜원

2022 auri-KIHASA 제1차 협동세미나 '다양한 모습의 지역사회 고령화, 다방면의 대응고민이 필요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 3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협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모습의 지역사회 고령화, 다방면의 대응고민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두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슈를 논의하고 협동정책연구 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알아보기'를 통하여 지역별 고령친화 수준을 정량 평가하는 진단지표의 개발과정과 시범적용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자체별 고령사회 대응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김세진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치매안심마을 확대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주제로, 치매친화적 사회의 정의와 필요성, 영국·미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확대를 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덕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과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고령화 이슈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2022 제1차 AURI 건축문화 자산센터 포럼 ‘근현대 건축유산 의 가치조사와 기록화’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지난 5월 27일(금) 서울도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제1차 AURI 건축문화자산센터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조사와 기록화’를 주제로 건축자산,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련된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기술·행정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주제발표에서 먼저 김영수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서울시 건축자산 조사와 기록화’에 대해 건축자산의 가치를 살린 창조적인 활용·관리방안, 시민공감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며, ‘영등포 대선제분’과 ‘선린인터넷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황지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록과 가치평가의 시차 : 청계천 일대 도시 기록의 행동력’을 주제로,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경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DMZ 안의 유일한 마을, 대성동마을에 대한 조사기록’으로, 명확한 목적과 제한된 조건에서 이뤄진 조사과정을 전하며 대성동마을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용준 문화재청 전문위원,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박성진 사이트앤페이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발제자들과 함께 근현대 건축유산 조사 및 기록화 방법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도시에 대한 권리'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5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건축·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식 공유 및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1960년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저서 '공간의 생산'에서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인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도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설명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커먼즈(Commons)'가 우리나라 도시정책에 가지는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자로 최

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나서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도시 커먼즈'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고영호 연구위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조시는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보행,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주거, 놀이터, 학교 등 여러 건축·도시·공간 분야를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건축도시정책 연구네트워크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6일(목)과 17일(금) 양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영남권(대구경북, 경남, 울산, 창원, 부산) 지역발전연구기관과 함께 2022년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지역발전연구기관과 함께 건축 및 도시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문화도시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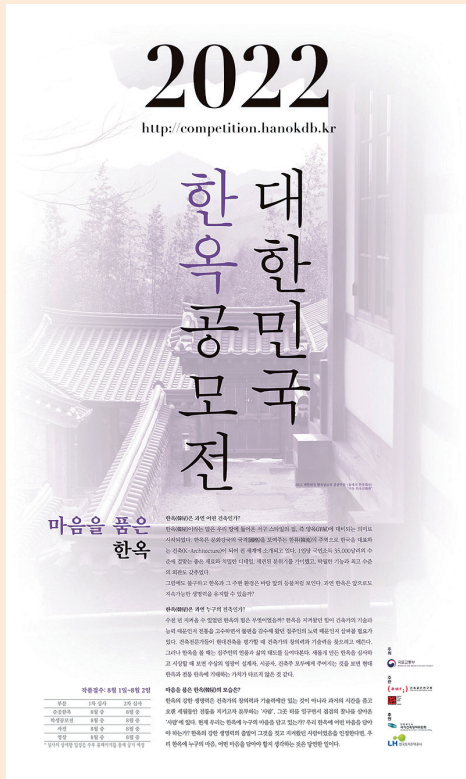
행사 첫 날인 16일에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현안과 지역별 추진성과를 공유하였다.

먼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문화도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승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이사가 '기억, 소통, 참여의 도시재생-강강이

예술마을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의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변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경남 문화도시의 현황과 문화도시 2.0 시대를 위한 제언',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대구광역시 시대별 미술관 조성을 통한 시각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별 문화도시 정책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17일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역발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지인 강강이 예술마을과 고려재강기념관(F1963)을 답사하였으며,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도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8월 1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열린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두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마음을 품은 한옥'을 주제로 준공한옥, 학생공모전, 사진, 영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준공한옥 부문은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한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0일 이전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자·건축주·시공사·대목장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학생공모전 부문은 공모전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4명 이내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영상 부문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한옥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한옥의 아름다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모집한다.

작품접수는 8월 1일(월)부터 8월 2일(화)까지 진행되며, 8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9월 초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에 공개된다.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auri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2년 6월 2일 ~ 8월 31일

공모기간 (3개월)

참여자격: 전 국민 누구나 가능(청년, 청소년 참여시 우대)

참여양식: 동영상 5분 이내, 포스터 A1, 에세이 4페이지 이내

접수방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idea.aurum.re.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시상계획안: 총 8개 직종(860만원)

구분	건수	포상	포상 종류
대상	1	상금 300만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상,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 제세공과금은 수상시 부담

문의: 건축공간연구원 (044-417-9637) 또는 공식홈페이지




주최 주관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시상내역

구분	건수	포상	포상 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상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목)부터 8월 31일(수)까지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idea.aurum.re.kr>)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영상·포스터·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이 담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필요성·작품성·효과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축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모두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2회 공모전에는 총 134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영상물로 제작한 '도시 탐구생활'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22
아시아
도시경관상
모집

건축공간연구원은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2022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에게 시상한다.

이에 아시아 각국·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NGO 및 시민단체, 학술 연구기관, 도시계획·건축설계·경관설계 및 기획 관련기업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도시·지역 ▲도시와 지역에 크게 공헌한 대규모 사업 ▲자연·도시 환

경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건조물·프로젝트 ▲설계단계의 프로젝트 등 ▲경관 발전에 공헌한 단체를 공모한다.

오는 8월 5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국내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10월~11월 중 일본 후쿠오카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작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 국가에서 총 11개 작품이 수상했으며, 우리나라는 '양천공원', '금빛수로', '서울경관기록화 사업', '삼각지마을' 등 총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2022. 05. 09^일 - 08. 05^금

ASIAN TOWNSCAPE AWARDS
2022 아시아 도시경관상 모집

(auri) 건축공간연구원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Habitat Society
ATDes
URC
(aur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NEWS

연세대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과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8일(금)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을 활성화하고 협력하여 연구하기 위해 연세대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과 함께 연세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19년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스마트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도시공간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2009년 U-시티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융합서비스 교육·연구·확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관련 협동 연구 및 자문 활동 ▲졸업생들에게 연구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자원 교류 ▲정부정책 지원 협력 ▲세미나·강연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스마트도시를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연구, 인력 양성, 정책 지원, 정기 세미나·강연회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4일(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9년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통해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2021년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정책연구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지원을 협력하여 수행해 건축물 수생애 주기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정보 및 교육·기술·자료의 교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장비, 시설 및 공간의 공동 활용 ▲세미나, 컨퍼런스 등 국·내외 관련 행사의 공동 개최 등으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임업진흥원과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5월 18일(수) 한옥건축과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국가한옥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한옥 공공건축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를 삭제하거나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목구조인 한옥 공공건축물은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한옥건축 및 공공건축물이 확산되면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두 기관은 한옥건축과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옥건축 및 공공건축물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산출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2회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2회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30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총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2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논문작성 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연구 분야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도시,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한옥, 건축자산, 마을재생, 경관, 건축·도시 빅데이터, 건축공간법제, 주거문화

이에 연구주제, 연구목적 등 연구계획서 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희망하는 멘토 또는 연구 분야가 유사한 연구진을 멘토로 매칭하여 진행된다. 또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료실 등 연구원 시설 이용과 연구원 보유 데이터 제공, 논문 투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 초에는 공동논문, 학위논문, 워킹페이퍼, 활동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원자 전원에게는 AURI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